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침묵... 오는 10일 전 입장 낼 듯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일〉

당원게시판 의혹에 친윤-친한 갈등 재표결 때 친한계 이탈 가능성 거론 특검 통과 시 분열·당정갈등 격화 추경호 중재... 한동훈 '전략적 모호성'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로 분열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유지하면서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한동훈 대표 가족이 무더기로 올렸다는 '당원게시판' 의혹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역시 친윤계로 평가받는 신평 변호

사는 한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촉구했다. 이에 친한계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신평 변호사의 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요구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친윤계에 한 대표를 향한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친한계 이탈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의총에서 '냉각기'를 갖자며 중재했고 한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특검법은 통과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만 마음을 먹어도 특검법 재의결은 쉬운 일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통과가 된다면, 당내 친윤계와 친한계의 분열과 당정갈등은 어

느때보다도 심해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공산이 크다. 이에 한 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전략적으로 피하면서 친한계로 하여금 특검 통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친윤계를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는 걸로 보인다.

친한계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관련해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명태균씨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수사도 생물이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12월10일(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일)이면 이제 열흘 남았다"며 "아마 최소한 (재표결) 2~3일 전에는 한 대표도 입장을 결정하지 않을까 보여진다. 상황을 다 종합해서 그때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친윤계의 당원 게시판 의혹 공세가 계속된다면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성국 조직부총장도 지금은 당 내부에서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부총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창원지검의 수사와 더해 친윤계의 대응도 한 대표가 지켜보느냐란 질문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추원내대표께서 서로 냉각기를 갖자고 했는데, 친윤이라는 분께서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민생토론회

## 尹 "배달수수료, 3년간 30% 이상 줄일 것"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정산주기↓  
온·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 박차  
민간상권 기획자 육성, 자금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상품을 주문해놓고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 등은 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악성리뷰 및 댓글·순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면서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순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면서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인, 상인 등이 지역 고유 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업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안 본회의 보고

野, 내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與 "초유의 정치폭행 자행"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추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은 오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이 국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과 감사원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표적감사나 감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고도 했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당 방탄 탄핵 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고위 공무원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만 거듭하는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검박으로 국정을 끌고 없이 흔들어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규탄했다.

/박태홍 기자

## 李 "경제침체 상황... 적극재정 정책 필요"

"지방소멸 등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일 경제침체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이 기반한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소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다.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밖에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



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방소멸에 대해서도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 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며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서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여야가 힘을 모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경주 에이팩(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지원 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